

韓國經濟의 虛實과 進路

李 榮 九

〈大韓投資諮問(株) 首席諮問役·經博〉

1. 序 論

우리나라 경제는 87년부터 무역수지흑자가 지속되어 89년에는 연간 1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고 국내 소비자물가도 한자리 숫자로 안정되어 2000년도 내에 1인당 GNP 1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리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88년 올림픽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 각계층의 욕구가 분출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노사분규를 비롯한 사회적 혼란은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어 90년부터 다시 무역수지적자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7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적자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등 자금흐름은 왜곡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물가불안은 가중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불만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남미 국가들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필자의 견해도 지금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1년만 더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중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확신한다.

89년도와 90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6.7%와 8.8%로 건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91년도에 는 예측치 8%에서 9%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경제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의 허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즉 제조업 및 수출산업에 의한 경제성장이 아닌 내수 및 건설부문과 향락산업이 중심이 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에 의한 경제성장이란 점에 큰 문제가 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면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즉 전체 취업자 1,769만명 중 1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13.2%인 230만명이고 2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29%인 505만명이며 3차 산업의 고용비중은 57.8%인 1,008만명으로 작년에만 65만명이나 증가하였다.

즉 고용구조에서 3차 산업의 고용인구가 지나치게 높아 제조업체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3차 산업 종사자 1,008만명 중 유흥업소 취업자가 34%나 되는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8%가 소비재산업중심에 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이 부족해 해외 의존형인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건설경기의 과열과 이에 따른 건설자재 부족 및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건설경기의 진정을 피하고자 건설경기 과열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건설경기과열 진정만으로는 물가 안정 및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리라는 보

장은 없다. 이에 필자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구조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대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韓國經濟의 문제점

1) 3高 現象의 심화

한국경제가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자금도 제조업체에 흘러가도록 자금흐름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는 高물가, 高금리, 高임금이라는 3중고에 허덕이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해지고 있다.

이 3중고를 해소시킬 수 없는 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살리기는 어렵다. 무역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금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한국이 20.1%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일본과 대만은 각각 4.5%와 14.2%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상품 제조원가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매물가도 한국이 4.2% 상승한 반면에 대만은 오히려 0.7% 하락했고 일본은 1.6% 상승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불리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리의 경우도 지난 해말 한국(최저금리)과 대만(프라임레이트)이 각각 10%이나 일본은 8.3%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보다 금리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물가불안 때문에 정부가 총통화관리를 분기별로 18%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만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4.9%, 도매물가는 1.3%나 증가해 올해 한자리 숫자의 물가상승이라는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11.2%나 증가한 실정이며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지수는 작년 한해 동안에만 20%가 넘는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총통화를 타이트하게 운용함으로써 현재 시장의 실제금리는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경쟁국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다.

2) 무역수지적자 폭의 확대

올해 들어와서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반대로 적자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4월말까지의 통관기준으로 한 무역수지적자는 55억6천만 달러나 되고 있어 올 무역수지적자 예상치 6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라면 올 한해 동안의 무역수지적자는 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무역수지적자 관리가 우리경제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4월말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비 12.4%가 증가한 212억1천만 달러나 되는데도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증대되는 것은 수입이 무려 전년동기비 26.7%나 증가한 267억7천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두자리 숫자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데는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즉 기술개발투자가 미약하여 해외기술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88년말 12%로 일본의 2.9%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데 기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인 전기·전자부품은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28%나 되어 일본의 2.8%보다 무려 10배나 높다. 결국 수출상품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하면 할수록 수입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수출이 증가할수록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수출도 12.4% 증가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향후 수출 증가율이 지금처럼 두자리 숫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올해 수출이 12.4% 증가한 것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중동 및 동유럽의 신규 시장개척에 기인한 것이다. 기존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올해 1·4분기 동안에 대미 수출은 38억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8.8%가 줄어 들었고, 대일본 수출도 28억6천만 달러로 0.9%가 감소되었다. 이는 우리의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수출경쟁력이 계속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향후 수출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취약한 기술개발투자

경영자협회에서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경제의 장래는 낮은 기술수준을 어떻게 빨리 극복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대다수 경영자들이 보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래가 불확실한 것도 기술개발투자 규모가 미약하고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데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급격히 늘지 않는 것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 때문이다. 1989년 말 기준으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은 2.9%인데 비해 일본은 6.2%, 미국은 5.4%나 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취약한 기술개발투자 규모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개발인력 비중이 7.4%인데 비해 일본은 무려 27%나 되고 있다.

취약한 기술수준은 선진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기술도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술도입료가 급증하여 선진국의 기술종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와 있다.

특히 수출주종품인 전기·전자업의 경우 순매출액의 10% 수준이 한해 기술도입료로 지불되고 있다. 지난 83년부터 90년까지 외국기업체에 우리나라 기업이 지불한 기술도입료 건수는 173건으로 컴퓨터가 46건, 반도체가 31건, VTR이 25건, 통신기기가 13건 등으로 전기·전자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들의 기술이전이 없으면 우리나라 전기·전자업체는 연쇄도산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전자업체가 자체기술개발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대단히 큰 도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뜻한다. 이렇듯 해외기술의존도가 높은 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민간은 합심하여 기술개발투자에 전력하여야만 한다. 87년부터 3년간 매년 60~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흑자를 전부 기술개발에 투자하였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 3년 동안의 무역수지흑자를 여행자유화 및 수입자유화에 낭비하고 지금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기술개발투자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정부도 과학기술개발투자에의 예산지원규모를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야만 한다.

태평양연안 12개국 중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고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한국이다(〈表-1〉 참조). 그러나 연구개발비 부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부부분의 비율이 가장 낮아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비 절대액 규모에서 가장

태평양연안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및 과학기술자현황

〈表-1〉

국 가	연구개발비 (백만 달러)	GNP대비연구 개발비(%)	공공과 사부문간의 연구개발비 비율(%)	과학기술자수(全日 근무기준)(명)	기 연 준 도
호 주	2,585	1.2	60 : 40	35,077	87/88
캐 나 다	7,336	1.32	43 : 57	57,900	89/90
중 국	2,829	—	51 : 49	397,200	88
인 도 네 시 아	75	0.12	—	32,038	88
일 본	82,860	2.85	20 : 80	395,773	88
한 국	3,430	1.9	17.7 : 82.3	47,213	88
말 레 이 시 아	110	0.8	80 : 20	5,537	88
뉴 질 랜 드	345	1.13	60.3 : 39.7	—	87
싱 가 포 르	188	0.9	39.8 : 60.2	5,876	88
대 만	1,288	1.16	50.8 : 49.2	23,541	87
태 국	74	0.2	—	—	86
미 국	126,100	2.6	48 : 52	746,700	88/89

資料 :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발표, 태평양 연안국의 과학기술 전망

큰 국가이면서 공공부문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48%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80% 가량을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60% 수준을, 대만은 50%를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7.7%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정부부문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기술개발투자를 말로만 강조하지 실제로는 정부의 의지가 미약함을 뜻한다.

3. 韓國經濟의 進路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경제가 향후 선진화되는 길은 첫째로 기술개발투자를 과감히 확대시키는 일이고 둘째로는 자금흐름의 왜곡을 바로 잡는 일이며 셋째로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며 넷째로는 소득불평등의 해소와 더불어 저축수준의 향상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1)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 기술개발투자는 GNP 대비 2.9% 정도인데 선진국 수준인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체기술개발투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선진국과의 합작투자 등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자금흐름의 왜곡현상 시정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통화관리를 타이트하게 조여 운용하여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서 제조업체의 자금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다. 이는 자금이 부동산투기 등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자금이 제조업체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도록 제조업체 지원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 세제개편과 더불어 금융면에서의 지원이 제조업체에 유리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부동산이 투기대상으로 되지 않게 획기적인 부동산투기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부동산과열경기 진정대책이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부동산과열경기 진정대책은 건축경기의 위축과 기업의 시설투자 위축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건축경기는 위축시키지 않는 선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이 투기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토지공개념을 정착시키되 기업의 시설투자는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3) 유통구조의 개선

우리나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물가안정을 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농산물의 경우 산지가격보다 몇배 높게 형성되어 있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보면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진근대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품원가와 최종소비자 가격과의 폭을 줄이는 상품유통구조의 근대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중간상인의 매점매석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득불평등의 해소와 저축률 증대

우리나라는 '富'를 기업이 아닌 한 개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본다.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불평등은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선진국처럼 기업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이를 제조업에 투자하면 일국의 성장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은 망해도 개인은 잘 산다는 상태로 기업보다는 한 개인재산의 부가 상대적으로 커서 개인간의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게 큰 문제이다. 부가 많은 개인의 과소비로 소비를 부채질하고 부를 개인을 위한 부동산투기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부가 많은 개인간에 부동산거래로 부동산가격을 인상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간에 부가 평등화되고 투기화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불어 평등화된 개인자금이 저축되도록 저축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6년부터 89년까지는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을 앞섰으나 90년부터는 총저축률이 35.3%로 총투자율 37.1%를 밀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 근검절약하여 저축률을 다시 88년 수준인 38% 이상으로 끌어 올리도록 노력해야만 물가도 안정되고 무역수지적자도 개선될 것이다. ▲